

	보 도 참 고 자 료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5. 11. 18.(화)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 규명 위한 특위, 구성 마무리

-헐값매각·줄속매각·특혜 의혹 전면 규명... 국회 차원의 체계적
진상조사 착수 -

- ☐ 더불어민주당은 18일(화)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박범계 국회의원, 이하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 ☐ 특위는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줄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 특위는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 4선, 특위 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경기수원시갑, 재선, 특위 간사), 허영 국회의원(강원춘

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재선), 김현 국회의원(경기안산시을, 재선), 박정현 국회의원((대전대덕구, 초선), 이강일 국회의원(충북청주시상당구, 초선), 박민규 국회의원(서울관악구갑, 초선),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초선), 이연희 국회의원(충북청주시흥덕구, 초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 박범계 위원장(정무위)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으며,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끝/